

## 전문공조 보증상품 다각화 시급

기사입력 2012-02-01 17:01:37 |

폰트    

### 정책연, 전문업체 설문서 63.0% 지적

전문건설사 3곳 중 1곳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관련 상품이 없어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전문공조의 상품 다각화가 필요하며 가장 시급한 상품으로 공사자재 및 물품 납품보증이 꼽혔다.

1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전문건설업체 1700곳(응답 17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합원 출자를 통해 운영되는 전문공조의 보증상품이 미비해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업체가 33.5%(58곳)였다.

또 건설공사 보증 때 전문공조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도 보증 이용한도 초과(30.9%)를 빼면 필요한 보증상품이 미비하기 때문이란 응답(21.9%)이 가장 많았다. 서비스 불만족 등 이용불편을 지적한 의견도 14.5%였다.

전문공조의 보증업무 개선책으로는 업계 현안인 보증한도 증액(27.6%)과 보증 수수료 인하(21.7%)란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보증방법 및 절차 단순화(19.8%)와 다양한 보증상품 개발(15.2%)을 주문한 곳도 상당했다.

특히 보증상품의 다양화 필요성에는 63.0%가 긍정했고 필요한 상품(타보증 기관 이용 때 주로 활용하는 상품)으로는 공사자재 납품보증(41.9%)과 기타 물품 납품보증(19.4%)이 꼽혔다.

유일한 정책연 책임연구원은 “공공공사 건설자재 시장은 전체 조달사업의 17%에 이르는 약 10조원에 달하며 건설·제조업간 융복합이 활발한 가운데 전문건설사가 자재납품 때 조합에 관련 상품이 없어 수수료가 비싼 다른 기관을 이용하는 것은 조합과 전문건설사에 모두 손해”라며 상품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재물품 납품보증제 도입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문공조 정관 개정, 전문공조 운영위 의결, 기존 보증상품의 납품계약에 포함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했고 이에 더해 준조합원제를 도입해 건설자재 및 제조업체의 전문공조 활용 길을 열어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설문에서도 전문공조에 자재 납품보증이 도입되면 이용하겠다는 업체가 85.7%에 달했고 적정 보증요율로는 1% 미만(44.4%)과 1~2% 미만(34.4%)이 가장 많았다. 다만 준조합원제를 도입할 경우 기존 조합원에 비해 할증된 요율을 적용(44.6%)하자는 의견이 다수였고 출자금과 이용한도도 제한하자는 의견(59.2%)이 동일하게 맞추자(37.6%)는 의견보다 우세했다.